

## 요약

# 안전예산 사전협의제 운영 제도적 근거 마련 안전총괄본부 안전예산팀 업무도 명확히 해야

## 세월호 사고 계기 안전예산 관심 고조... 정의·체계적 관리 어려워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그에 따른 적정예산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의 일차적 책임기관이라는 점에서, 안전예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체계화된 관리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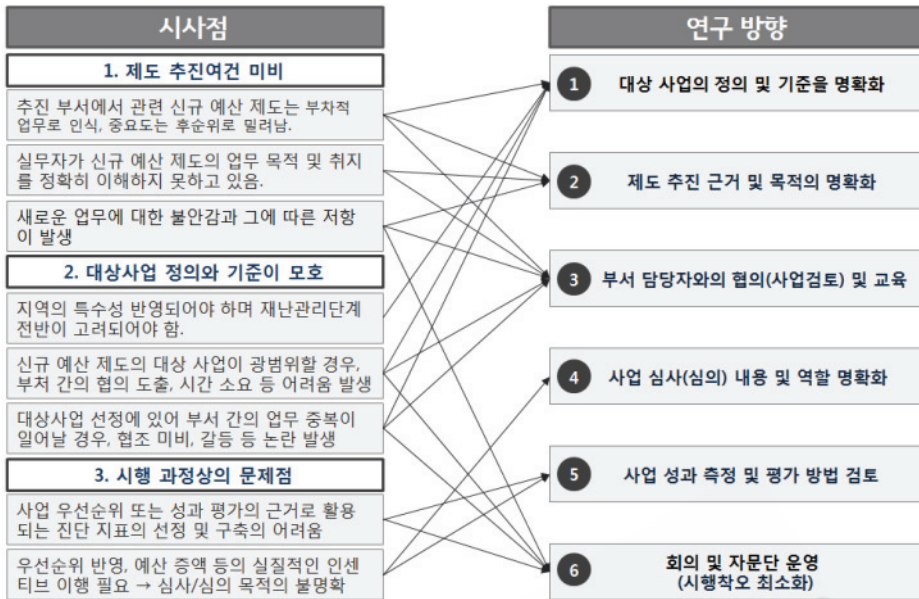
안전예산은 일반적으로 재난사고 예방 및 구호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유사한 사업들이 산재하여 내용적 범위의 확정과 성과측정이 곤란하다. 이러한 안전예산이 갖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적시적 자원 투입은 쉽지 않다.

## ‘안전예산 체계화’ 연구방향은 사업 정의·기준 명확화 등 6가지로

서울시는 국내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안전예산의 체계화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업이다. 안전예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부족한 현실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립된 안전예산 개념 및 분류체계는 안전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간이 될 것이다.

안전예산 체계화에 관한 논의는 기존 연구 사례, 중앙정부 및 서울시 안전예산 관련 제도 운용 현황, 유사 예산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분석은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문헌조사, 담당자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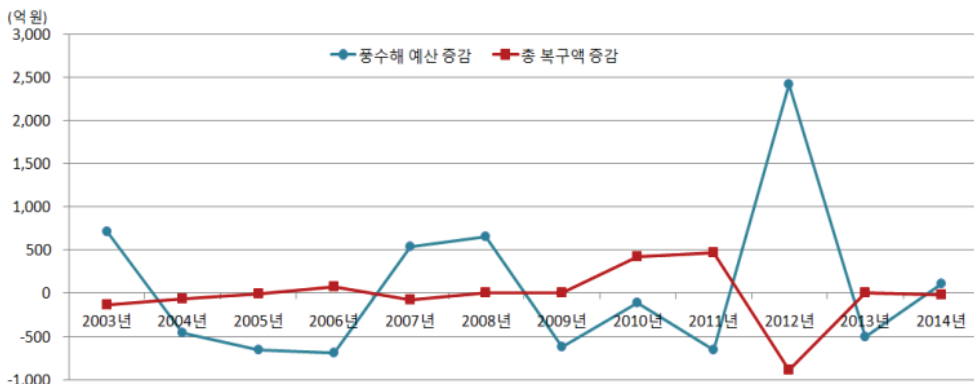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크게 제도 추진여건 미비, 대상사업 정의와 기준 모호,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세 가지 틀을 기반으로 연구 방향을 안전예산 대상사업의 정의 및 기준의 명확화 등 6가지로 제시하였다.



[그림 1] 안전예산 관련 시사점을 근간으로 한 연구 방향 정립

## 안전예산 부족 시 복구비는 증가 확인... 전체 규모 파악엔 한계

서울시 재원배분 현황 중에서 풍수해를 대상으로 연도별 사업비(예산)와 총 복구액의 증감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해당 재난 유형의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 해당 연도의 피해에 대한 복구액이 증가하는 개략적인 경향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풍수해 및 총 복구액 증감 추이

서울시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예산 중에서 치수, 하수, 도로시설물, 소방·방재를 중점 대상으로 국한하고 있어 전체 안전예산 안에서의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7개 대분류, 21개 중분류로 설정

안전예산의 적절한 정의와 현황 파악을 위하여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중분류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이는 안전예산 참고문헌 검토, 국가의 안전예산 분류체계, 담당자 협의 및 자문 검토, 재난안전대책 프로세스, 대도시로서 서울시 특성, 기존 예산 편성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시되었다.

- 대분류(7개): 안전기반 구축·운영, 위험시설 기능 강화, 사회·생활안전 관리강화, 교육·훈련 및 안전 R&D, 안전기능 보완지원, 재난예방보완시설 확충 관리, 예비비로 구분함(대도시 발생률이 높은 ‘사회·생활안전사고’의 효율적 대비를 위해 별도 분류).
- 중분류(21개): 안전예산 사업을 적절한 체계로 관리하기 위하여 7개의 대분류를 각 각 1~4개의 중분류로 세분하여 안전예산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표 1]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			
대분류		중분류	
1	안전기반 구축·운영	1-1	재난 및 안전 정책 수립
		1-2	재난 및 안전 관련 시스템 개발 구축 운영
		1-3	재난 및 안전 장비 구축 운영
		1-4	재난 및 안전 관리 역량 강화
2	위험시설 기능 강화	2-1	도로시설 및 설비 안전기능 강화
		2-2	재난관리시설 기능 강화
		2-3	위험 및 취약 시설 기능 강화
3	사회 및 생활 안전 관리 강화	3-1	사회 안전 관리
		3-2	생활 안전 관리
		3-3	복합재난, 신형 재난 안전관리
4	교육·훈련 및 안전 R&D	4-1	시민 안전의식 제고
		4-2	위기관리능력 배양 훈련
		4-3	재난 및 안전 관리 직무역량 강화
		4-4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련 연구

[표 1 계속]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			
대분류		중분류	
5	안전기능 보완지원	5-1	재난 및 안전체험/추모관 설치 운영
		5-2	안전 지원 및 인증
		5-3	안전 관리 및 예방
		5-4	재난 및 안전 대응 기반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재난예방보완 시설 확충 관리	6-1	예방 목적의 도시 기반시설 신설 및 기능 유지
		6-2	시설위탁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
7	예비비	7-1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목적 예비비

## 분류기준에 따른 2015년 서울시 안전예산 규모는 1조 6,431억 원

수립된 분류기준 적용 및 서울안전자문단 사업 대상 여부 검토를 통해 확정된 2015년 서울시 전체 안전예산 편성 대상사업 및 규모는 총 614개 사업, 1조 6,431억 원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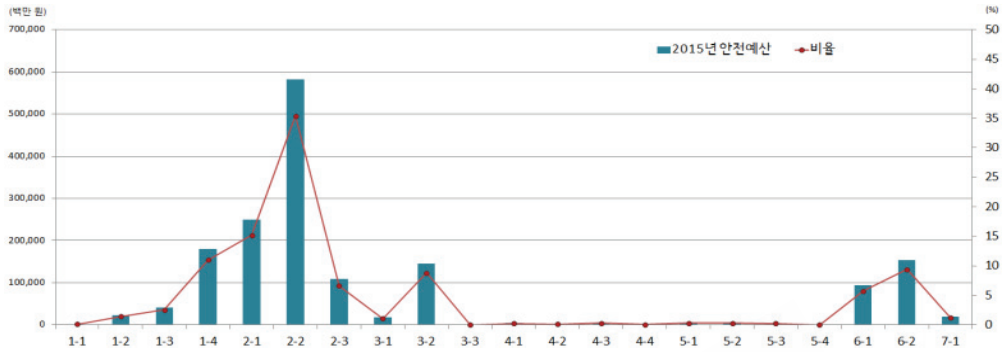
### 1) 분류기준별: 위험시설 기능 강화가 9,406억 '전체의 57%'

분류기준에 따른 서울시 안전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분류 2의 위험시설 기능 강화 부문이 약 9,406억 원으로 전체 안전예산의 57.25%의 비중을 차지했다.

[표 2] 분류기준별 2015년 서울시 안전예산 현황

대분류/중분류	2015년 서울시 안전예산			
	예산(천 원)	비율(%)	사업건수	비율(%)
1 안전기반 구축 · 운영	247,805,642	15.08	127	20.68
2 위험시설 기능 강화	940,625,030	57.25	325	52.93
3 사회 및 생활 안전 관리 강화	162,015,584	9.86	70	11.40
4 교육 · 훈련 및 안전 R&D	10,557,945	0.64	29	4.72
5 안전기능 보완지원	13,750,087	0.84	20	3.26
6 재난예방보완시설 확충 관리	248,370,559	15.12	42	6.84
7 예비비	20,000,000	1.22	1	0.16
<b>합계</b>	<b>1,643,124,847</b>	<b>100</b>	<b>614</b>	<b>100</b>

그중에서도 중분류 2-2의 재난관리시설 기능 강화 부문이 전체 안전예산의 35.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분류 3-2의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식품 의약품 등 생활 안전 관련 대책 사업이 8.80%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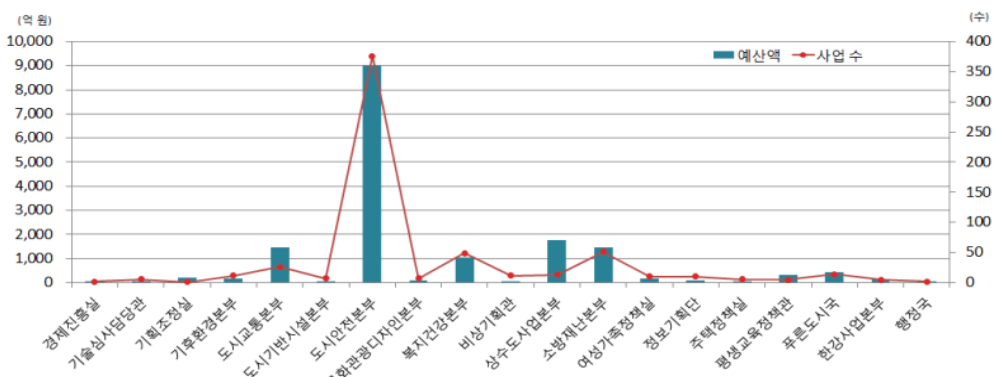


[그림 3] 중분류기준별 2015년 안전예산 현황

2) 실국별: 도시안전본부 9,004억 ‘최고’, 경제진흥실 9억 ‘최저’

2015년 서울시 안전예산은 19개 실국에 편성되어 있다. 도시안전본부가 376개 사업, 9,004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본부 내에서는 대분류 2가 291개, 6,328억 원으로 가장 많다. 반면 안전예산액이 가장 적은 실국은 경제진흥실(9억 원)이고, 안전 사업 수가 가장 적은 실국은 기획조정실(1개)로 나타났다.

각 실국 내에서 시설 사업 성격이 큰 대분류 2와 6의 사업비중이 가장 높은 실국은 한강사업본부(100%)이며, 서울시 재난 및 안전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출된 대분류 3의 사업비중이 가장 높은 실국은 여성가족정책실(100%), 평생교육정책관(100%)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실국별 2015년 안전예산 현황

## 대분류 5·6·7의 진단지표 매우 부족... 결과지표 추가 개발 필요

분류기준별 안전예산 검토를 위해 도출한 진단 지표<sup>1)</sup>는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대분류 5, 6, 7분야로부터 도출된 진단 지표가 매우 부족하며, 대부분의 지표들이 산출지표로 구성되어 결과로서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이를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예산 투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진단 지표의 4개년 추이를 살펴본 결과, 특히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품 안전 관련 지표들은 정제 또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시 식중독 관련 피해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발생건수와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표 3]**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별 진단 지표 도출 결과

대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		진단 지표		
		중분류		개수	비율	소계
1	1-1	재난 및 안전 정책 수립		1	0.9	38.5
	1-2	재난 및 안전 관련 시스템 개발 구축 운영		4	3.4	
	1-3	재난 및 안전 장비 구축 운영		3	2.6	
	1-4	재난 및 안전 관리 역량 강화		37	31.6	
2	2-1	도로시설 및 설비 안전기능 강화		8	6.8	21.4
	2-2	재난관리시설 기능 강화		12	10.3	
	2-3	위험 및 취약 시설 기능 강화		5	4.3	
3	3-1	사회 안전 관리		21	17.9	20.5
	3-2	생활 안전 관리		3	2.6	
	3-3	복합재난, 신형 재난 안전관리		0	0.0	
4	4-1	시민 안전의식 제고		6	5.1	13.7
	4-2	위기관리능력 배양 훈련		3	2.6	
	4-3	재난 및 안전 관리 직무역량 강화		7	6.0	
	4-4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련 연구		0	0.0	
5	5-1	재난 및 안전체험/추모관 설치 운영		2	1.7	6.0
	5-2	안전 지원 및 인증		4	3.4	
	5-3	안전 관리 및 예방		1	0.9	
	5-4	재난 및 안전 대응 기반 네트워크 구축 운영		0	0.0	

1) 현재 서울시에서 성과관리계획서와 예산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 중에서 안전사업과 관련된 항목을 대상으로 도출함.

**[표 3 계속]**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별 진단 지표 도출 결과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			진단 지표		
대	중분류		개수	비율	소계
6	6-1	재난 및 안전 예방 목적의 도시 기반시설 신설 및 기능 유지	0	0.0	0.0
	6-2	시설위탁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	0	0.0	
7	7-1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목적 예비비	0	0.0	0.0
합계			117		100.0

## 서울시 안전예산 대분류별 강·단점 파악해 연계전략·편성방향 도출

앞에서 언급된 안전예산 분류기준별 기본 목표, 2014~2015년 안전예산 현황과 사업내용, 서울시 안전사업 SWOT 공통분석, 진단 지표와 현황을 고려하여 현재 서울시의 안전예산 대분류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예산 연계 전략 및 편성방향을 도출하였다.

**[표 4]** 향후 서울시 안전사업 세부 편성 방향

구분	연계 전략	세부 편성 방향
강점 기회	- 시민의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 활용	- 높아진 안전 관심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시민 참여 강화 - 대시민 안전교육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의식 기반 강화
	- 안전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	-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감시역량 강화 필요 - 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한 선진 소방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 구조적 예산의 효율적 예산 투입 필요	- 풍수해 관련 시설물 예산이 집중투자되고 있으며, 저감시설 확보 역시 증가추세에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투입 및 관리 필요
약점 기회	- 안전예산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의 역량 강화 검토: 최신기술과의 접목	- 현재 안전예산 별도 관리를 바탕으로 사업 수와 편성액이 현저하게 낮은 분류의 해당 기능 및 역량 강화 필요 - 최신 기술을 접목한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련 R&D 역량 강화
	- 예산 투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안 도출	- 안전예산 분류별 성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 지표 개발 필요
강점 위험	- 비구조적 안전대책 사업 신규 발굴	- 현재 구조적 대책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안전예산을 비구조 대책 사업에 편성을 높이는 방안 추진
	- 시민 체감도와 밀접한 재난 중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유형에 대한 예방 강화 필요	- 생활 및 사회 안전예산 증액 검토를 통하여 5대 범죄 및 4대악 관련 사고의 발생 저감 노력 필요 - 초고층, 초대형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 및 재난대응훈련 강화 필요
	- 예산의 혜택이 취약한 계층 또는 지역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도입	- 재해 취약 대상 및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재난 대비 대응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필요

[표 4 계속] 향후 서울시 안전사업 세부 편성 방향

구분	연계 전략	세부 편성 방향
약점 위험	- 서울에 발생 가능한 신종 대형재난 유형에 대한 R&D 및 예산 투입 강화	- 서울형 복합재난 및 신종재난에 대한 R&D 투자 강화 필요 - 서울의 특징적인 현상(지반침하, 시설물 노후화, 다중이용시설 증가, 특정 재난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재난 안전사고 대비 필요 -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 필요
	- 도시계획 전반에 안전의식 도입	- 재난 안전의식 제고 또는 관련 R&D를 도시계획 수립 전반에 도입 필요
	-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증가 대응 전략 필요	- 시설물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선정 - 안전사업 업무연속성 유지를 통한 안전예산 사업의 지속성·효율성 제고

## 서울시 안전예산의 지속 효과적 관리를 위한 6가지 방안 제시

### 1) 안전예산 사전협의회 운영 관련 조항 서울시 조례에 명시

안전예산 사전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항에 의거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국민안전처에 사업계획, 우선순위,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총괄하여 각 부처와 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부서 안전예산을 총괄하도록 하는 법규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안전예산 사전협의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

현재 안전예산 사전협의회에서는 첫 번째 예산요구서에 대한 총괄 협의를 진행 중이나, 예산 요구 부서 담당자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안전예산 사전협의회가 제도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는 상시적 업무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일시적 정책 사업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안전예산 사전협의회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추가, 공포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에 따라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제도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관련 개념의 정의, 시행 주체, 시행 주기, 시행 대상, 근거자료 등에 관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각종 계획 및 대책, 매뉴얼 등이 수립되는 주기가 각각 상이함. 협의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서 간 혼란이 발생함.

- 예산 유형에 따라 수립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 시기도 정교하게 검토되어야 함.

## 2) 안전총괄본부 안전예산팀은 사업 기획 등 총괄업무에 집중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이후 재난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은 급격하게 확산되었고, 재난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재난 안전 기능을 체계화하고 안전분야별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직 구조 변화에 따른 안전예산 관리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안전예산 업무를 담당하던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재편하고 물순환안전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5년 8월 31일 시행).

조직은 진화적 면모를 가지기 때문에, 효율적 예산 관리 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조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갈등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문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예산팀의 자체검토는 총괄하는 수준(지속적 사업을 위한 기획, 사업의 피드백 반영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고 범위가 넓은 업무들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할 분야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 3) 분류기준은 중분류로 세분화하되 세부기준은 지속적 보완

현재 국가 안전예산 분류체계를 그대로 서울시에 적용하는 것은 서울시 고유의 재난 및 안전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체계를 국가 안전예산 분류체계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대분류 기준을 기본 틀로 하되, 신규사업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로 세분화시켜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 특성과 현재 안전사업 비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및 생활 안전 관리 강화」를 대분류 3으로 별도 분류하였다. 중분류 3-3 「복합 재난, 신형 재난 안전관리」는 현재 사업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안전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신규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현행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체계는 상향식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단계에서 취약한 분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을 분류하는 데 있어 명확하게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전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분류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에 빈번히 발생하거나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높은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분류체계에 유연하게 적용·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예산이 서울시의 모든 실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해당 실무 담당자들이 동일한 기준에서 안전예산을 분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국내 여건 변화와 재난 및 안전 관련 이슈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 4) 예산투입 효과 정량적 판단 가능한 신규 진단지표 개발

예산 사전협의제도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또는 예산 투입 효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모든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서와 성과관리계획서에서 목표 달성지표란 명칭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현황 값을 매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안전예산에 적용하기에는 과학적 논거가 미흡하고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향후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전예산 사업은 복잡하고 원인과 피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기본속성 때문에 특정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으로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렵지만 연관이 있는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제 안전예산 투입이 효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신규 진단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5)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재난관리단계는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재난 단계 고유의 특성과 서울시의 재난 발생의 특징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방단계의 예산 관리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무분별한 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로 기존 자원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 셋째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법·제도 점검의 중요성이다.

재난 대비 단계에서는, 첫째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둘째로 가용자원의 실태 파악 및 확보, 셋째로 훈련과 교육에 대한 적정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재난 대응 단계에서는 첫째로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둘째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우선적인 투자, 셋째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의 명확한 구분, 넷째로 협조체제 구축에 필요한 예산 항목 구체화가 필요하다.

재난 복구 단계에서는 첫째로 예비비 편성과 더불어 신속한 복구 예산 배분, 둘째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의 명확화, 셋째로 복구 과정에서 예산 낭비 방지, 넷째로 예방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 6) 안전예산 기획·집행의 투명성 확보하고 소통채널도 구축

예산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투명성(Transparency) 확보이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예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예산의 투명한 공개는 필수적이다. 특히 안전예산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또한 안전분야는 기준과 대상이 모호하고 예측이 어려워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사안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다. 복잡 다양한 여건과 상황의 반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정운영과 관련된 제반(기획, 집행, 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 예산 분야와 관련해서도 연차별 예산서를 공개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 기획 차원의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예산의 기획단계에 한정되어 있고, 예산 규모가 서울시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정보 공개가 제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안전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전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화가 필요하다. 안전예산의 제반 과정에서 의사결정 내용은 경쟁적 견해의 개진을 통한 과학적 증거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하고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안전예산과 관련한 소통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 현행 통로에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예산 내용을 논의하기는 어려우므로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전제로 한 지속적인 안전예산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안전예산은 사회적·정치적 촉발요인에 의해 일회적으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획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예산에 대한 공론화의 장 마련은 상기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안전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구축과 지역별 세분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